

e-거버넌스 연구의 경향 분석: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유재미**, 오철호***

요약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거버넌스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e-거버넌스(electronic 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e-거버넌스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문제해결 및 정책결정 행태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시장-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조정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최근 15년간 우리나라의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진행된 e-거버넌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e-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접근관점 및 연구영역 측면에서 볼 때, 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 등의 행정영역과 ICT 정책 및 사업 등의 정보통신 영역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목적의 경우, 국내의 e-거버넌스 연구는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문제지향성을 띠고 있으나, 이론검증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연구나 현상 내지 사건의 인과관계 모형 검증을 통한 설명적 연구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경향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e-거버넌스의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거버넌스, e-거버넌스, ICT거버넌스, 전자정부, 정보화

A Review on E-Governance Research Trend and Analysis - An Empirical Analysis of Academic Papers in Korea -

Yu, Jae-mi, Oh, Cheol H.

Abstract Since the 1990s, the notion of governance has been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way of understanding the new trend of public administration. Then, it was followed by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e-governance (electronic governanc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governance means an approach to understanding how to manage state affairs. It emphasizes the notion of governance where various actors (government-market-civil society, etc.) adjust and cooperate through mutual collaborative network, not a unilateral decision-making form of government, in order to solve common problems. It also carries the notion of 'electronic' in the sense that it operates on the basis of utiliz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is study systematically attempts to analyze research trends and methodologies of e-governance in major Korean journals and proceeding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tudies over the last 15 years. Some of the findings are worth noting: first, e-governance studies in Korea are in large measure concentrated on the government-centered perspective. Also, past studies tend to focus on problem-solving by suggesting policy alternatives. Past studies, thus, seem to pay relatively less attention to explanation of the phenomena through rigorous analysis.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review is expected to shed light on some of conceptual or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e-governance studies, thus,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f e-governance.

Keywords: governance, e-governance, ICT governance, e-government, informatization, network

2015년 12월 15일 접수, 2015년 12월 16일 심사, 2015년 12월 23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13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108)

** 송실대학교 행정학부 강사(bluesky7507@naver.com)

*** 교신저자, 송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coh@ssu.ac.kr)

I. 들어가며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나 시장 또는 시민사회에 의한 전통적인 국가경영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특히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새로운 통치양식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세계체제와 국가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국가 내적으로도 국가쇠퇴의 경험과 국가, 시장, 시민사회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증대되었다(김석준 외, 2002: 15).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의 독점적 국정운영, 민주주의의 미숙함, 시민사회의 자율성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거버넌스로서의 국정운영 체계의 확립을 추구하였다(홍정화 외, 2010: 527). 특히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국가운영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한 정부부문의 혁신 방향의 일환으로 거버넌스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념은 학문적 특성과 관심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즉, 정치학 분야에서는 다원적 주체들 간의 협력적 통치방식을 의미하는 네트워크 통치, 협력적 통치로 정의되며(조명래, 1999: 39), 경제학 분야에서는 공동체적 자율관리제(Ostrom, 1990), 사회학 분야에서는 국가나 시장과 구별되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조정양식의 원형(Jessop, 1998: 31) 내지 자기조직적 네트워크(Rhodes, 1996) 등으로 정의되며, 행정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국가통치행위 및 방식을 의미하는 국정관리로 이해되고 있다(정정길, 2006: 518-563; 권기현, 2009: 23-24). 이를 종합하면, 거버넌스란 정부가 독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 내지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정운영 방식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이렇게 거버넌스이론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라는 이념적 가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e-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즉, e-거버넌스란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시장-시민사회가 쌍방향적인 협의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이연우, 2009: 67).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전자정부의 고도화 단계를 거쳐 2006년 유비쿼터스 코리아 전략, 2008년 융합IT단계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화 부문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이러한 전자정부 및 정보화 부문의 급격한 발전 및 사회적 확산과 더불어 e-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회과학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e-거버넌스 연구가 어떠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e-거버넌스의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e-거버넌스의 이론적 이해

1. e-거버넌스의 등장배경 및 개념

1) e-거버넌스의 등장배경

거버넌스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경험한 이후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에 걸쳐 발생한 탈산업화 및 탈근대화 변화로 인해 민주화, 분권화 등의 새로운 질서가 강조되면서 기존 정부중심의 통치체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였다(조화순, 2006: 190). 즉, 과거와는 다른 국가, 시민사회, 기업 간의 새로운 형

태의 상호작용 및 협력체제를 구성하는 거버넌스 개념이 국정운영 전반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도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고, 자연스럽게 e-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e-거버넌스의 등장은 기술적 차원과 이념적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한국전산원, 2004: 12-13). 우선 e-거버넌스는 기술적 차원에서 정보기술이 쌍방향적인 정보의 공유와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통치의 형태를 가속화시켰다. 첫째로, 정보기술의 신속성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간의 의사소통을 신속하게 해주며,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양적 증가 및 속도의 신속성은 조직상하간의 정보가 전달되는 중간노드(Nodes)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와 통합 시스템의 발달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실현시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즉각적인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유통과정의 변화를 가져와 과거 정부에 의해 독점되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정부업무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끝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부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 주었다.

이념적 차원의 경우, e-거버넌스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정부 내부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케인즈주의적 정부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였다. 즉, 케인즈주의적 정부는 공공재의 비독점적 공급, 관료제의 비효율성,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정부실패를 가져왔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가적인 정부를 재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Osborne,

et al., 1992; 한국전산원, 2004: 14-15).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 등장은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성과중심의 관리,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하는 신공공관리론의 기초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원하는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생산, 습득, 공유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인터넷상의 커뮤니티를 활용해 현실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국가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사회의 공동체의 활성화와 정부의사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참여 확대를 가져올 수 있었다.

2) e-거버넌스의 개념

e-거버넌스 개념논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UN과 미국행정학회(ASPA)에서 e-거버넌스는 정책적 관점에서 정부조직, 선출공무원, 국민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e-거버넌스는 정부와 국민의 네트워크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민주적 과정의 열린 정부, 투명한 의사결정을 구현하는 과정(김성태, 2003: 95)을 말한다. 다시 말해 e-거버넌스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행정업무의 신뢰성, 투명성, 효율성을 보장하는 정부운영형태라고 볼 수 있다(신영진, 2005: 17).

e-거버넌스는 기존 거버넌스의 개념에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하는 'e'의 개념이 조합된 개념(노승용, 2009; 조화순, 2006; 송희준, 2004)으로 협의적 의미와 광의적 의미로 정의된다. 즉, 협의적 의미에서의 e-거버넌스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정부 내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자적 서비스 전달을 의미하는 행정 관리방식을 의미한다. 광의적 의미에서의 e-거버넌스란 정부를 포함한 사회주체간

의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전자민주주의 단계로 보다 폭넓게 정의되기도 한다(이연우, 2009: 67).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정보통신기술과 거버넌스의 구성요소간의 진화단계를 어디까지 포괄해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데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단방향성에서 양방향성으로, 분산처리에서 통합처리로 고도화되는 한편, 거버넌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민과 시장을 지배하는 관계에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참여 및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적 네트워크(Consultation Network)로 진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e-거버넌스는 정보통신기술과 거버넌스적 요소들이 상호 진화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 행위자들이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네트워크화 되어 협의 및 조정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명석, 2006; 송경재, 2006; 명승환, 2001; 특히 이연우, 2009: 67).

2. 선행연구

행정 및 정책 관련 학술논문 중 e-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연구는 조화순(2006)의 연구가 유일하다. 조화순(2006: 189-202)은 e-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개념 및 본질 등 이론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e-거버넌스 연구의 동향을 신공공관리, 정책네트워크, 전자민주주의의 세 가지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입장에서 e-거버넌스는 민간기업의 전략을 제도적으로 모방하는데 있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정책네트워크적 입장에서 e-거버넌스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 기업, 시민사회 간에 어떠한 정책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전

자정부는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정부내부 및 외부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정부로 이해되며, e-거버넌스의 행위자(정부, 기업, 시민)간의 관계를 정부-정부, 정부-시민, 정부-기업 관계로 분류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전자민주주의 입장에서는 e-거버넌스는 정보기술을 통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발전은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화순(2006)은 이러한 e-거버넌스 관련 연구들이 신공공관리, 정책네트워크, 전자민주주의 입장에서 각기 다른 연구의 강조점을 가지고 발전해 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신공공관리 측면에서는 e-거버넌스를 정부의 정보기술을 통한 개혁, 정책네트워크 측면에서는 국가-시민사회의 상호작용, 전자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그에 따른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조화순(2006)의 연구는 e-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서 수행된 것으로 연구의 내용분석의 틀이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e-거버넌스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그 외에는 e-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국가정보화의 변화과정을 연구한 논문(이연우, 2009)이 있으며, 국내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이혜원 외, 2013) 등이 참고할 만하다. 이연우(2009)는 e-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정보화 촉진시행계획상의 정보화사업을 연계하여 국가정보화 정책의 변화과정에서의 각 요소들을 분석한 후 e-거버넌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국가정보화의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이연우(2009: 66-80)는 2000년~2007년까지 8년간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e-거버넌스의 구성요소(즉, 적용대상 범위, 행정이념,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 유형, 정보통신기술의 실현수단)별로 국가정보화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예컨대, 대상범위 측면에서 정부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사업의 수는 확대

되어 왔으나, 정보화 전체예산 규모 대비 투입비율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행정이념 측면에서 능률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정보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소외계층을 위한 형평성 측면이나 시민참여 극대화를 위한 민주성 측면의 국가정보화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연우(2009)는 e-거버넌스 관점에서 국가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순 정보제공과 기반조성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가 보장되고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정책의 초점을 개방성과 투명성, 형평성에 맞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대민서비스 및 기업 친화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혜원 외(2013)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연구동향 및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해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혜원 외는 연구 주제 및 내용에 따른 분류기준을 정보화시스템, 정보화 서비스, 전자정부 거버넌스, 전자민주주의 및 전자적 참여, 정보보호/보안, 정보화 및 전자정부 연구 등으로 세분화 하여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연구내용 측면에서는 전자민주주의, 시민참여, 정보격차 등 최근에 등장한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스마트 정부의 등장에 따른 정부실패, 빅데이터의 운용, 플랫폼정부, 정부3.0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혜원 외, 2013: 18).

이상과 같이 조화순(2006)이 e-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본 이후, 최근 10여년간 e-거버넌스의 개념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e-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최근 연구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

서 이 글에서는 2001년 전자정부사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된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행정 및 정책분야의 e-거버넌스 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e-거버넌스 관점에서 일반적인 연구논의를 전개하였거나 또는 e-거버넌스의 개념을 응용한 연구 등 e-거버넌스 관련 국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행정 및 정책부문에 요구되는 e-거버넌스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분석틀

사회과학분야에서 e-거버넌스 개념을 도입 및 활용한 연구는 정치 및 행정영역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e-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분야의 주요 학회 및 대학, 국책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최근 e-거버넌스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향후 e-거버넌스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연구범위

이 연구의시간적 범위는 전자정부사업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1년(국가정보화백서, 2014: 48)부터 2015년 9월까지 발표된 학술논문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학술정보시스템과 각 학회 홈페이지 내의 자료 검색이 가능한 논문들로 한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행정 및 정책학계의 주요 학술논문의 발간 기관인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학회보 및 학술대회발표논문과, 거버넌스 및 공공관리 분야의 논문이 주로 게재되는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공공관리학회의 학회보를 비롯하여

1) 전자정부사업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2001.3.28.일 제정)이 제정되어 7월 1일 시행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행되는 「한국행정연구」의 게재 논문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정책」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학에서 발간되는 관련 학술지 중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행정논총」과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국정관리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e-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메타분석 방법을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내용의 분석 대상논문의 경우, 첫째, 논문의 제목이나 키워드에 'e-거버넌스 또는 전자거버넌스, ICT 거버넌스' 라고 명시적으로 표현된 논문을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요약문 및 본문 내용을 살펴보고 정보통신기술(ICT), 전자정부, 정보화사업 등에 거버넌스 이론을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거나, 이를 응용하고 있는 연구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다 정확하게 연구의 주제와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요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연구되는 e-거버넌스의 연구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목진휴 외(2005)의 내용분석틀을 참고하고 e-거버넌스 연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추가하였다.

① 연구자 특성 측면에서 첫째, e-거버넌스 관련 연구논문의 발행기관을 중심으로 학회, 국책연구원, 민간대학 연구원을 구분해 살펴보고, 둘째, 연구자의 신분을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 포함), 기타(대학원생)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복수저자 연구논문의 경우, 제1저자(주저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② 연구의 접근관점(방법)의 경우, 거버넌스 이론의 주제별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시장중심의 거버넌스, 시민중심의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즉, 거버넌스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시장 중심의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였다(문순홍 외, 2000: 9-12; 김석준 외, 2002: 17 재인용). 국가중심의 거버넌스는 국가가

〈표 1〉 연구대상 논문: e-거버넌스 관련 연구

구 분		e-거버넌스 관련 연구 논문 수	비율(%)
학회	한국행정학회 및 정기학술대회발표집	18편(학회지1, 정기학술대회17)	34.0%
	한국정책학회지 및 정기학술대회발표집	6편(학회지 3, 정기학술대회 4)	11.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지	3편	5.7%
	한국거버넌스학회지	4편	7.5%
	한국공공관리학회보	2편	3.8%
연구원	한국행정연구	1편	1.9%
	정보화정책	15편	28.3%
대학	행정논총	1편	1.9%
	국정관리연구	2편	3.8%
총 계		52편	100.0%

* 참고: 동일한 내용 및 제목 등 중복된 논문은 1개만 선정

시장과 시민사회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을 지니며,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통치형태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새로운 통치 행태를 정착시키는데 초점을 가지는 접근방법이다. 한편, 시장중심의 거버넌스는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주의를 지향하여, 이러한 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경쟁력 향상,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이다 또한, 시민중심적 거버넌스는 개인이나 시민, NGO 집단이 제도적으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김석준 외, 2002: 17-50).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 대상논문들이 어떤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연구의 접근방법을 추가 보완하였다. 이를 위해 e-거버넌스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국가중심의 접근방법, 시장중심의 접근방법, 시민중심의 접근방법 등으로 구분하였다. e-거버넌스 접근방법은 다음의 <표 2>와 같이 정의내리고, 연구의 주제 및 내용 등을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③ 연구영역 측면에서 e-거버넌스 관련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으나, 연구의 주제 및 내용에 따라 정치, 행정 및 정책, 정보통신(방송통신분야), 과학기술, 교육, 기타 등 거시적 차원에서 영역을 범주화해서 살펴보았다. 즉, e-거버넌스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고, 연구의 주제나 내용이 정치, 행정 및 정책, 정보통신(방송통신), 과학기술, 교육 등의 영역에 해당되며, 각 영역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e-거버넌스의 개념

이 이슈화되고 있거나, 적용 내지 적용가능성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연구가 해당된다.

④ 연구주체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을 정책 및 사업의 시행 주체별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시행 주체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e-거버넌스 개념이 도입되거나 적용가능성을 논의 중인 정책 또는 사업(정보기술서비스 포함)을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⑤ 연구목적(예, 정책제안 제시 여부, 이론정립 및 문제제시 여부 등), 분석유형(예, 설명적 연구, 기술적 연구), 연구방법(예, 방법론 및 자료수집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술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진휴 외(2005: 138-139)의 연구분석틀에서 사용한 기준을 준용하였다. 즉, 연구목적의 경우, e-거버넌스 연구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와 정책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단순히 현상을 설명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연구로 구분하였다. 분석유형 측면에서, 설명적 연구란 현상이나 사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는 연구를 의미하며, 기술적 연구란 현상이 무엇인지 기술하고자 하는 연구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연구방법론의 경우, 양적 연구란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대상의 속성에 숫자를 부여해 자료를 수집하여 이러한 객관적인 양적데이터를 통계분석기법 등 사용해 분석·설명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반면에, 질적 연구는 자료가 주제와 범주의 형태로 구분

<표 2> 접근관점(방법)의 정의

구 분	정의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접근관점	정부의 새로운 통치 행태를 정착시키는데 초점을 둔 연구 (예: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정부기능의 역할 및 배분 등)
시장중심의 거버넌스 접근관점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경쟁력 향상,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둔 연구(예: 아웃소싱, 정보기술서비스의 개발 등에 대한 민간 참여 등)
시민중심의 거버넌스 접근관점	개인, 시민, NGO 등이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둔 연구

〈표 3〉 연구의 내용 분석틀

분류기준	세부내용
연구자의 특성	(1) 연구발행기관: 학계, 국책연구원, 민간연구원(대학 연구소) (2) 소속기관별 특성: 대학교수, 공무원, 연구원, 기타(대학원생 등)
연구의 접근방법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연구,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연구 시민참여적 거버넌스 연구
연구영역	정치, 행정 및 정책, 정보통신(방송통신분야 포함), 과학기술, 교육, 기타
연구대상	시행 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타
연구목적	(1) 정책제안 제시 여부 (2) 이론정립, 문제해결방안 제시, 이론정립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제시, 기타
분석유형	설명적 연구, 기술적 연구
연구방법	(1) 연구방법론: 양적연구, 질적연구 (2) 자료수집방법: 1차 자료, 2차 자료, 기타(해당없음)

자료: 목진휴 외(2005)의 내용분석틀을 수정·보완하고 일부 기준을 추가해서 작성함

해 분석되며, 통계분석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연구를 의미한다. 자료수집방법에서 보면, 1차 자료는 설문 조사, 면접, 관찰 등 연구자가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2차 자료는 기존의 자료를 사용해 연구목적이나 연구방법에 적합하게 가공해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자료 분석을 하지 않는 질적 연구는 기타(해당 없음)로 분류하였다.

IV. e-Governance의 연구 경향: 분석결과

1. 연구자의 특성

e-Governance 관련 연구에 대한 연구자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추진기관(발행 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학회의 학술논문이 33편(6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책연구원의 논문이 16편(30.2%), 대학(원)의 연구소 발행 논문이 3편(5.7%)으로 e-거버넌스 관련 논문이 총 52편 발간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학회 및 대

학(원)의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학술논문은 연구자의 특정 전공분야에서 e-거버넌스 관점을 활용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거나, 전문분야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조한 e-거버넌스 체계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특정분야에서의 e-거버넌스 활성화 전략을 실현하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분야의 전문 국책연구원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5편의 e-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에서의 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적용 가능한 세부 분야의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대상논문을 발행하는 학회 및 연구기관은 행정 및 정책분야(거버넌스 및 공공관리 분야 포함), 국가정보화 분야에 대표성을 가지는 기관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e-거버넌스 관련 연구는 주로 정부부문에서의 실제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연구자의 특성을 보면, 대학교수 직군이 73.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연구원 직군이 15.1%의 비중을 나타냈다. 그 이외에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와 한국투명성

〈표 4〉 연구기관별 e-거버넌스 관련 연구 현황

구 분	논문 수	비중(%)
학 회	33	62.3
국책연구원	16	30.2
대학(원) 연구소	3	5.7
합 계	52	100.0

〈표 5〉 연구자별 특성¹⁾

구 분	연구자 수(명)	비중(%)
대학교수	38명	73.1%
공무원 ²⁾	3명	5.7%
연구원 ³⁾	8명	15.1%
기타(대학원생 등)	3명	5.7%
합계	52명	100.0%

주1) 복수저자의 경우, 제1저자(주저자)의 직업군을 중심을 정리함

주2) 공무원: 정부기부 근무자 포함

주3) 연구원: 공공기관(예,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연구원 직군 포함

〈표 6〉 e-거버넌스 관련 연구 추이

(단위: 편)

구분	발행연도(2001~2015년)															전체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행정학회	0	1	0	1	3	3	0	2	0	0	1	7	0	0	0	18
정책학회	0	0	0	0	0	0	0	0	0	2	1	2	1	0	0	6
정보화진흥원	0	0	0	1	2	2	1	1	1	2	0	1	2	1	1	15
정책분석평가학회	0	1	0	0	0	1	0	0	0	1	0	0	0	0	0	3
거버넌스학회	0	0	0	1	0	0	1	0	0	0	1	0	0	0	1	4
공공관리학회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2
한국행정연구원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서울대정책연구소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2
전체	0	2	0	3	5	7	3	5	2	5	3	10	4	1	2	52

기구 공무원 직군이 5.7%, 기타 직군으로 석사 및 박사대학원생이 5.7%의 비중으로 e-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거버넌스 관련 연구추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e-거버넌스 관련 연구 논문은 2001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07년도부터는 증가 추이가 주춤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가, 2012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

이는 정권교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4년부터 유비쿼터스라는 미래의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6년 3월 'u-Korea 기본계획(2006~2010년)'이 최종 확정된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국가정보화백서, 2006). 따라서 이 시기 e-거버넌스 내지 IT 거버넌스, 전자정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정립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조화순, 2006; 소영진, 2006; 신영진, 2006).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윤상오, 2008)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전자정부 및 정보화정책의 추진 전략(김석주 외, 2008)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2012년 3월, 정보화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2008년에 수립된 제4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08~2012)이 수정(국가정보화백서, 2012)된 시점이고, 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기 전이라 국가의 ICT 거버넌스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 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예, 최창현, 2012; 정원희, 2012; 김명환, 2012; 김상묵, 2012; 성지은, 2012; 이맹주, 2012; 권해수 외, 2012; 김성철, 2012; 송희준, 2012)이 수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연구의 접근방법 및 연구영역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 내리고 있으나, 거버넌스의 주체에 대한 관점에서 정리하면,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및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다(문순홍 외, 2000: 9-12). 특히 사회과학분야 중 공공부문에서 거버넌스적 접근방법을 활용해 국정운영과정의 혁신을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국가중심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 시각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 이론이 등장한 계기가 정부실패 내지 정

부의 통치능력 상실 등의 원인으로 인해 새로운 국정 운영을 지향하는 거버넌스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중심적 접근 이외에도 다른 주체들(시민사회, 시장 등)의 국정운영과정에서의 참여가 새롭게 강조되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권기현, 2009: 24).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주도적인 관리하는 입장을 지닌다. 특히 이 접근방법은 잘못된 통치 행태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기업가적 정부나 효율적인 민간의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정부의 새로운 통치 행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에,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접근방법은 시장의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지향하여 공공부문을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히 이 접근방법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고객 및 시장의 선호에 대한 대응성, 고객으로서의 국민들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지향하며, 정부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민영화와 탈규제를 주장한다. 또한, 시민중심적인 거버넌스 접근방법은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다원화된 시민사회가 책임 있게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이 접근방법은 정부의 정책결정과 정부업무관리과정에 개인인 공무원과 고객 및 시민의 참여가 극대화 될 때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자세한 내용은 홍정화 외, 2010: 531-533 참조).

따라서, 본 연구는 e-거버넌스의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 볼 때, 주체별로 어떠한 거버넌스 접근방법을 활용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지 구분해서 살펴본다. 거버넌스 접근방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국가중심적인 거버넌스 접근방법이 적용된 연구가 전체의 71.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중심적 거버넌스 접근방법 적용 연구가 15.4%,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접근방법 적용 연구가 7.7% 정도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의 거버넌스 연구는 거버넌스 개념 및 특징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업무효율성 제고, 고객지향적인 서

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통치행태로의 개혁에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연구되어 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화사업 및 전자정부, 행정정보체계 구축 등 2001년 이후 지속적인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국가 정보화 관련 주체간의 역할과 위상정립 등 국가중심의 e-거버넌스 논의가 중심이 되어 전개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전자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 전자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중심적 거버넌스 연구도 수행되었다.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연구로는 IT아웃소싱 체계 연구, 콘텐츠 산업 생태계 연구 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공부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e-거버넌스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정치, 행정 및 정책, 정보통신(방송통신 포함), 과학기술, 교육 등 세부적인 정부 영역을 구분하여 어떠한 영역에서 e-거버넌스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영역별로 살펴보면, 전자

정부 및 국가정보화정책 등 행정 영역에서의 e-거버넌스 연구가 전체 분석대상의 40.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기술(방송통신 포함) 분야의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30.8%,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의 e-거버넌스 연구가 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 영역 연구의 경우, 주로 전자정부의 추진전략과 과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예컨대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이론 정립 연구(송희준, 2004; 소영진, 2006; 권기현, 2009), 전자정부의 추진전략과 과제 관련 연구(김석주 외, 2008; 윤상오, 2008; 신영진, 2005), 전자정부의 효과성 측정 및 측정지표 관련 연구(황성수 외, 2011; 왕재선, 2013)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변미리, 2005; 오형국 외, 2006; 윤종현, 2007; 한주희 외, 2015)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보통신(방송통신) 영역의 연구는 ICT 거버넌스의 역할 및 구축방안 관련 연구(김명환, 2012; 김성철, 2012; 송희준, 2012; 이명주, 2012; 권해수 외, 2012; 윤건 외, 2013; 최창현, 2012)가 있으며, 인터넷 규제 관련 연구(강휘원,

〈표 7〉 거버넌스 연구의 접근관점

구 분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시민중심적 거버넌스	기 타	합계
논문 수(편)	37	4	8	3	52
비중(%)	71.2%	7.7%	15.4%	5.7%	100.0%

〈표 8〉 거버넌스 접근관점별 연구영역

구 분	연구영역						전체	
	정치	행정	정보통신 (방송통신포함)	과학기술	교육	기타		
접 근 관 점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1	15	11	7	3	0	37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0	1	3	0	0	0	4
	시민중심적 거버넌스	2	5	1	0	0	0	8
	해당없음	0	0	1	0	0	2	3
전체	3 (5.8%)	21 (40.4%)	16 (30.8%)	7 (13.5%)	3 (5.8%)	2 (3.8%)	52 (100.0%)	

2002; 조화순 외, 2010)와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연구(이성식, 2006) 등이 있었다. 과학기술 영역의 연구는 대부분 과학기술정책의 의사결정기구 및 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배귀희, 2004; 성지은, 2005; 홍형득, 2007; 김성수, 2010; 성지은, 2012; 천세봉 외, 2013)가 진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 영역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따른 갈등 관리 관련 연구(조화순, 2004; 서형준 외, 2014)와 e-Learning 품질관리 체계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타 연구로는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이혜원 외, 2013)와 e-거버넌스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조화순, 2006)가 포함된다.

이상과 같이 영역별 e-거버넌스 연구 경향을 종합해 보면,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행정 분야 연구(정보화 및 전자정부사업 관련 연구)가 그동안 e-거버넌스 연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영역에서도 ICT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역할 및 체계 정립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

3. 연구대상: 시행 주체별

연구대상인 e-거버넌스 관련 연구 논문들을 시행 주체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표 9>과 같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연구가 69.2%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

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연구가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 앞에서 살펴본 연구영역별 결과가 보여주듯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행정 및 정책 영역의 연구 대부분이 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 관련 연구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그 동안 행정/정책 분야에서의 e거버넌스 연구의 대상이었던 전자정부 및 정보화 사업 등이 국가의 전략적인 국정과제로써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법령 및 지침 또는 행정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하여 집행하고 있는 점에서 하나의 가능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및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이나 지역적 수요를 고려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전자민주주의 실현 및 정책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민간 부문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콘텐츠 산업 생태계 연구(최창현, 2012), IT아웃소싱 거버넌스 체계 및 서비스 관리에 관한 연구(신영진, 2006; 안준모 외, 2010) 등이 진행되었다.

4. 연구목적

1) 정책대안 제시 여부

국내의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수행된 e-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당면한 정책현안에 적극적으로 해결하

<표 9> 연구대상: 시행 주체별

구 분	논문 수(편)	비중(%)
중앙정부	36	69.2
지방정부	6	11.5
공공기관	1	1.9
기타(민간)	5	9.6
해당없음	4	7.7
합계	52	100.0

려는 문제지향적 연구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즉, e-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을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구내용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의 제시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55.8%인 반면, 정책대안의 제시 없이 시론적 논의에 그치거나 문제제시만 하고 있는 경우도 44.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2) 이론정립 및 문제해결방안 제시 여부

추가적으로, 국내의 e-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구내용을 살펴보고 연구의 목적이 이론정립, 문제해결제시, 이론검증을 통한 문제해결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단순히 정책사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내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가 4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론검증을 통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9.6%로 나타났다. 또한 e-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해 전자정부 및 ICT 거버넌스의 이론적 정립을 모색하는 연구는 3.8%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단순히 문제제시만 하거나 단

순한 사례분석만을 실시하는 등 기타 유형의 연구가 38.5%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즉, 최근의 e-거버넌스 연구들의 경우, e-거버넌스 관점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나, 이론검증을 통한 실증분석 연구가 많지 않아 이론적 체계성이나 연구결과와의 엄밀성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 따라서 이런 연구결과들이 현실에 적용된 경우를 고려할 때 현재 e-거버넌스 모습의 타당성이나 수준의 적절성 등을 점검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5. 연구의 분석 유형

e-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분석유형에 따라 설명적 연구, 기술적 연구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상 및 문제에 대하여 서술함으로써 단순히 평균적인 모습을 제시하려는 기술적 연구가 82.7%로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면에, 현상이나 사건의 인과관계 모형 검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설명적 연구는 1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e-거버넌스 관련 연구는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가설검증 등

〈표 10〉 정책대안의 제시 여부

구 분	논문 수	비중(%)
정책대안 제시	29	55.8
정책대안 미제시	23	44.2
합계	52	100.0

〈표 11〉 이론정립 및 문제해결 방안 제시 여부

구 분	논문 수	비중(%)
이론정립	2	3.8
문제해결방안 제시	25	48.1
이론검증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5	9.6
기타	20	38.5
합계	52	100.0

〈표 12〉 연구분석 유형

구 분	논문 수(편)	비중(%)
설명적 연구	9	17.3
기술적 연구	43	82.7
합계	52	100.0

〈표 13〉 분석유형별 정책대안 제시 여부²⁾

구 분			연구목적		전체
			정책대안 제시	정책대안 미제시	
분석유형	설명적 연구	논문 수(편)	6	3	9
		비중(%)	11.5%	5.8%	17.3%
	기술적 연구	논문 수(편)	23	20	43
		비중(%)	44.2%	38.5%	82.7%
전 체		논문 수(편)	29	23	52
		비중(%)	55.8%	44.2%	100.0%

원인분석을 통한 엄밀한 연구보다는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내용, 과정 등을 서술하여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기존 e-거버넌스 연구가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한 시론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향후 e-거버넌스 연구는 e-거버넌스의 수준이나 성과,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인과성이나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규명하는 실증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분석유형과 연구목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설명적 연구 중 가설검증을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전체 연구 중 11.5%이며, 정책대안을 제시 하지 않은 연구는 5.8%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술적 연구 중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전체 분석대상 논문 중 44.2%로 나타났으며,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는 38.5%인 것으

로 나타났다.

6. 연구방법

e-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살펴본 결과, 계량 데이터 통계기법을 활용하는 양적 연구가 21.2%(11편)에 불과한 반면, 사례연구 등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78.8%(41편)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 데이터나 통계기법을 활용한 연구 중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 1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9편이며, 기존의 통계데이터를 활용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연구는 6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앞서 살펴본 분석유형별 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e-거버넌스 연구는 현재와 같이 현상 및 문제를 기술하는

2) *Ch-square=0.524, df=1, p=0.469이고, Goodman & Kruskal Tau=0.10, p=0.473, Cramer V=0.100, p=0.469로 나타나 유의확률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e-거버넌스 연구의 분석유형에 따른 정책대안 제시 정도를 발견적 맥락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표로 정리함.

〈표 14〉 연구방법

구 분	논문 수(편)	비중(%)
양적 연구	11	21.2
질적 연구	41	78.8
합계	52	100.0

〈표 15〉 자료수집방법

구 분	논문 수(편)	비중(%)
1차 자료	9	17.0
2차 자료	6	11.3
해당없음	37	69.8
합계	52	100.0

이론적 또는 개념 탐색적 논의에서 벗어나 문제분석 및 대안검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양적 연구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균형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V. 맺으며: 향후 e-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제언

1. 분석결과 종합

이 연구는 지난 15년간 국내의 행정 및 정책 분야에서 진행된 e-거버넌스 관련 연구에 대하여 연구 내용 및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e-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이론 정립 차원에서 진행된 기존 선행연구(예, 조화순, 2006)와 달리,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측면에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거버넌스 연구의 특성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연구 내용분석틀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분석틀을 활용해 국내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진행된 e-거버넌스 관련 연구 경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향후 e-거버넌스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거버넌스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접근관점을 보면,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연구(대상논문 전체의 71.2%)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e-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분야는 일반 행정 영역(대상논문 전체의 40.4%)이며, 다음으로는 특정 정책 영역(30.8%)으로 나타났다. 즉, 행정영역의 전자정부와 일반적인 정보화정책과 정보통신 영역의 세부적인 ICT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e-거버넌스 연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및 사업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사업이기에 국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국가차원의 정책적 흐름에 맞추어 학계에서도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e-거버넌스 연구도 국가 중심적인 접근관점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목적에 보면, 정책대안을 제시한 연구가 55.8%로 과반이상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한 문제제기 또는 시론적 차원의 논의만 전개한 연구가 44.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이론정립 및 문제해결방안 제시 여부를 살펴본 결과,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4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단순한 사례분석 또는 이론정립이나 해결방안 제시없이 문제제기만을 수행한 기타 연구(38.5%)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해 이론검증을 통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9.6%)는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 연구의 질 제고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하여 분석유형을 보면, 현상이나 사건의 인과관계 모형 검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려는 설명적 연구(17.3%)가 현황 및 문제에 대한 기술적 연구(82.7%) 비해 매우 부족하다. 즉, 국내의 e-거버넌스 연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문제지향성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이론검증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2. e-거버넌스 연구의 한계 및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행정 및 정책,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e-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하여 개별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특정한 연구내용이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용성이 낮으며 내용상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이하에서는 국내 e-거버넌스 연구의 한계 중 몇 가지 이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편향성 문제

e-거버넌스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가를 포함한 시장,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문제해

결을 위해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해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e-거버넌스 연구는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시각에서 연구의 주제 및 내용 등이 편향되어 있어서, 시장, 시민사회 등 여타의 다른 행위자들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활성화 등 시민중심적 내지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차원의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e-거버넌스 연구는 행정 및 정책 영역과 정보통신 영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물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정보화 및 전자정부 사업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란 국가뿐만 아니라 시장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 및 조정과정을 통한 국정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자적 관점의 정책 연구보다는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하여 국가 이외의 시장(민간), 시민단체, 의회 등 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 관계 분석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이나 관련 부처의 추진체계 등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내용을 전자민주주의, 시민참여, 정보기술의 적용, 개인정보보호 등 e-거버넌스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 및 주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예, 오철호 외, 2012).

2) 이론정립 노력 미흡 문제

국내의 e-거버넌스 연구의 경우, 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 등 ICT를 활용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현재 직면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처방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e-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각 변수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통해 이론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설명적인 연구보다는 단순히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단순한 사례분석이나 추상적인 이론적/개념적 논의를 통해 해결안을 제시하는 기술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1년 국가정보

화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래, 세계적인 전자정부 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자연스럽게 e-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e-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각 분야의 현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모형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지식창출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즉, 한국이 처한 많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e-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 주장이나 방법의 제시는 초기연구단계에서는 이해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e-거버넌스 연구의 진화적 발전과 설명력 제고를 위한 이론구축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희박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e-거버넌스 연구에서 무엇을 주요변수로 포함할 것인지, 각 변수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런 변수들의 관계가 세부적인 적용분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과적으로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갖춘 e-거버넌스의 이론적 틀은 존재하는지 등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학술적 차원에서 e-거버넌스 연구 자체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이론구축적 연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개별 연구자의 노력보다도 연구공동체의 협력적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e-거버넌스 연구의 통섭적 접근에 대한 이슈로 확대될 수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이런 문제의식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시급하다(정책분야의 통섭적 연구에 대해서는 오철호, 2008 참조). 또한 정책적(또는 응용적) 차원에서도 단순히 e-거버넌스 개념을 적용해보려는 시도를 넘어서 e-거버넌스 개념이나 분석틀을 활용한 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거나, 현실에서 e-거버넌스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조건 연구 또는 구축된 e-거버넌스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한 단편적인 주장이 아닌 실효성 있는 연구 노력이 요구된다.

3) 연구방법의 객관성 부족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e-거버넌스 연구는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 서술하는 기술적 연구, 질적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물론, 연구자의 전공 영역이나 연구주제에 따라 그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량적 분석방법,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방법 및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신중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e-거버넌스 연구가 학술적인 측면과 더불어 실용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방법론적 노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사례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단순한 사례기술이 아니라 사례분석설계에 입각하여 타당한 사례분석의 근거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연구 분야와 마찬가지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양 방법론이 지니는 한계를 상호보완하려는 연구노력을 통하여 e-거버넌스 연구의 질적 향상과 활용성 제고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성구 (2008). “e-Governance와 투명성: 우리나라 부패현실과 새로운 반부패 시스템으로서의 e-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 강휘원 (2002). “자율규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설계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36(3) : 185-205.
- 권기창·배귀희 (2004).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507-526.
- 권기현 (2009). “전자정부와 거버넌스: 전자정부, 정보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 4(2): 21-41.
- 권해수·이삼열 (2012). “해외 ICT 거버넌스 분석 및 우리나라 ICT 거버넌스 체계의 재설계방안 연구.” 한

- 국행정학회 2012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3.
- 김명환 (2012). "ICT 거버넌스의 역할과 형태." 한국행정학회 2012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9.
- 김상묵 (2012). "개방형 조정방식과 ICT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2012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6.
- 김석주·김두현 (2008). "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전략과 과제." 『한국공공관리학보』, 22(1): 77-100.
- 김석준 외 (2002). 「거버넌스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 김성근·오승운·신신애 (2010).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체계정립을 위한 EA 노력의 변화 분석." 『정보화정책』, 17(3): 21-35.
- 김성수 (2010).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의 운영방식 비교." 한국정책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성철 (2012). "ICT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방안." 한국정책학회 2012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흥희 (2006). "E-Learning 품질 관리 체계로서의 협동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 한국행정학회 2006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8.
- 목진휴·강근복·오철호·최영훈·홍형득·김희경·박영원 (2005). "한국의 정책연구 지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4(3): 132-154.
- 문신용·윤기찬·박태형 (2006). "e-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향: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 명승환·최영훈 (2005). "차세대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 주요광역시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2(4): 131-149.
- 변동건·목진휴·정운수·김희경·장덕희 (2002). "지방정부 Cyber-Governance 구현에 대한 평가: 홈페이지 구축·운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12(2): 109-134.
- 변미리 (2006). "전자정부의 시민활용과 시민참여: 서울시 전자정부 사례." 한국행정학회 2006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6.
- 서형준·명승환 (2014). "프레임 분석을 통한 NEIS 갈등과정 분석과 정책적 함의." 『정보화정책』, 21(3): 56-84.
- 성지은 (2012).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검토와 새로운 개편 방안." 한국행정학회 2012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성지은 (2005). "과학기술정책결정구조의 변화: 참여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5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7-43.
- 소영진 (2006).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개념정립 및 구현 방안." 『한국행정연구』, 15(4): 55-81.
- 송정재 (2015). "한국의 웹 캠페인 규제와 <선거법> 개정의 정치적 해석." 『정보화정책』, 22(3): 47-60.
- 송정재·장우영·허태희·임정빈 (2010). e-거버넌스와 시민참여: '사이버 반사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 115-137.
- 송희준 (2012). "ICT 생태계를 위한 공공 거버넌스 구축 전략." 한국정책학회 2012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송희준 (2004). "전자정부사업의 전자거버넌스 진화단계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1(2): 1-20.
- 신동익 (2007). "정보기술아키텍처 공통기반지식 연구." 『정보화정책』, 14(4): 117-138.
- 신영진 (2006a). "IT거버넌스에 따른 행정정보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6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6.
- 신영진 (2006b). "IT 아웃소싱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6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6.
- 신영진 (2005). "한국형 전자정부 주도의 IT정책방향 재설계: e-Governance구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5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7-32.
- 안준모·김경미·김용재 (2010). "IT 아웃소싱 서비스 관리를 위한 표준 프로세스 성숙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현장 사례연구." 『정보화정책』, 17(1): 102-119.
- 오철호 (2008). "정책연구와 통섭논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한국정책학회보』, 17(4): 37-62.
- 오철호·고숙희 (201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 22(4): 27-49.
- 오형국·권기현·이홍재 (2006).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3): 139-166.
- 왕재선 (2013). "전자정부의 효과: 거버넌스 지표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1(4): 1-29.
- 윤건·이건·박정훈 (2013). "규제와 진흥 관점에서 바라본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 연구." 『정보화정책』, 20(2): 20-38.

- 윤상오 (2008).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평가.” 「한국공공관리학회보」, 22(2): 89-123.
- 윤종현 (2007). “전자적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활동과 시민참여정도 간의 경로분석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1): 287-314.
- 이맹주 (2012). “기술융합시대의 국가 ICT 거버넌스 경계 설정방안.” 한국행정학회 2012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성식 (2006). “사이버범죄와 시민의 역할.” 「정보화정책」, 13(3): 69-86.
- 이연우 (2009). “e-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국가정보화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16(2): 65-81.
- 이연우·정재동·이용건 (2008). “국가정보화 변화과정에 관한 고찰: e-Governance 관점에서.” 한국행정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7.
- 이혜원·명승환 (2013). “국내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연구 동향 분석.” 「정보화정책」, 20(4): 3-22.
- 임준현 (2011). “Government Web Technologies and Environmental Regulatory Governance(전자정부가 환경규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2): 21-51.
- 정원희 (2012). “ICT 거버넌스 해외사례의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회 2012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9.
- 정정길 (2006). 「행정의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 학현사.
- 정찬모 (2012). “ICANN의 진화과정 고찰을 통해 본 한국 인터넷주소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정보화정책」, 19(3): 36-49.
- 조명래 (1999). “신도시정치(학)의 문제설정과 쟁점.” 「공간과 사회」, 11: 24-61.
- 조화순 (2006). “e-거버넌스 연구의 동향과 한계.” 「정보화정책」, 13(2): 189-205.
- 조화순 (2005). “정보화시대 국가주권과 사이버공간의 세계정치.” 「정보화정책」, 12(4): 114-130.
- 조화순 (2004).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NEIS 갈등 사례 연구.” 「정보화정책」, 11(1): 36-50.
- 조화순·김민정 (2010). “인터넷 규제정책의 굿 거버넌스 모색.” 「한국정책학회보」, 19(3): 57-78.
- 천세봉·하연섭 (2013).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에 관한 신제도주의 분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4): 87-113.
- 최영훈 (2008). “전자정부의 맥락에서 본 국민-공무원 관계: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5(4): 155-171.
- 최창현 (2012). “C-P-N-D 생태계와 ICCT (Information, Communication, Contents Technology)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2012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3.
- 한국전산원 (2004). 「국가정보화 전략 및 성과관리 연구: 2004년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2014 국가정보화백서」.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2010 국가정보화백서」.
- 한주희·주창범 (2015). “한국 전자정부의 발전과 시민참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2): 237-258.
- 홍형득 (2007).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적 이해를 위한 이론모형.” 「국정관리연구」, 2(1): 143-162.
- 황성수 (2011). “전자거버넌스와 정책제안 설정: 전자정부사이트에서의 정책제안과 시민참여 탐색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2): 1-21.
- 황성수·명승환 (2011). “전자정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효과성 측정모델 탐색연구: 전자거버넌스 (e-governance) 측정모델 개발.” 한국행정학회 2011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홍정화·장지호 (2010).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과 문제점 고찰: 1997년 이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27-557.
- Jessop, B. (1998). “The Rise of Governance and the Risks of Failure: The Case of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155): 29-45.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des R. A. W. (1996).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4(4): 652-667.